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한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에서 지금까지 우리 농축업의 현대화·과학화를 주도했던 농촌진흥청을 폐지, 민간에 연구기관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여태껏 담당해 온 농업의 연구개발과 지도기능은 물론, 포괄적으로는 농촌과 농민까지도 포기하는 행위이다.

농촌진흥청의 고유 업무는 일반 기업 또는 다른 연구기관들이 감당해낼 수 없는 공공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해 온 농촌진흥청을 민간화 하는 것은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기업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이 농업연구를 하는 데에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아무리 환경과 농업을 생각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내 농업의 불확실한 여건과 투자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민간기업의 기본 개념상 무작정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은 정부'를 위해, 그리고 시장경제와 수요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농업연구자들이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들을 찾아가 '현장에로기술연구'

를 위해 십시일반 연구비를 모아 달라고 해야 한다면 과연 동의하겠는가? 연구비 자원을 찾다찾다 결국 다국적 기업에게 매달려 연구비를 타내야 한다면 그 연구는 순수하게 우리 농축산물만을 위한 연구일 수 있겠는가?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비 발주를 위해서는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찾아가야 하는가? 이 당선인이 주장하는 실용주의 조직개편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정부기구 자체가 효율과 분배의 적정선을 찾아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 당선인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진정 우리나라 농업과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당선된 만큼 국민에 실망감을 안겨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농축산업은 국가의 기반산업이고 국민 건강과 밀접한 중요산업이다. 이러한 우리의 농축산업을 지지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이 점을 유념하고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우리 농민들을 위해 옳은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 한국오리협회 임직원 일동 —